

친정과의 거리와 자녀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배 호 중
(성균관대학교)

한 창 근*
(성균관대학교)

양 은 모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해 2000년 이후 혼인(초혼)한 가구를 대상으로 혼인 이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을 살펴보았다. 특히 친정과의 거리가 첫째아 출산 속도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혼인가구와 친정 간의 근접도를 ① 직선거리(km), ② 동일 광역자치단체 소재 여부, ③ 범주화된 거리로 구분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타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친정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선거리가 가까운 신혼부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를 빨리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정과의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거리에 따른 출산속도의 차이가 비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2000년대 들어 혼인한 가구를 대상으로 친정과의 거리와 첫째아 출산 속도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조부모 돌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조부모의 돌봄에 대한 정책발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출산, 친정과의 거리, 생존분석, 한국노동패널

* 교신저자: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chkhan@skku.edu)

■ 투고일: 2017.4.26 ■ 수정일: 2017.6.13 ■ 게재확정일: 2017.6.14

I. 서론

저출산·고령화는 서구 유럽 국가들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지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1960년 6.0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01년 이후 현재까지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이삼식 등, 2015, p.3).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성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양적·질적 저하와 함께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 2000년대 들어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노력도 본격화되었다. 특히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 이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11). 이후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한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의 시행으로 출산율의 반등세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요인들이 저출산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에 따른 가정내 돌봄자원의 공백 또한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Talyor-Gooby, 2004; Gordon & Shire, 2006; 이정원, 2007; 배정연, 홍석자, 2010; 김일옥 등, 2011; 고은현, 2011; 전은화, 2013; 이하나, 최영, 2015에서 재인용). 실제로 2015년 10월을 기준으로 신혼부부의 42.9%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혼인한 연차일수록 맞벌이의 비중이 더욱 높았다. 부부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따른 자녀 출산 이행속도를 살펴보면 외벌이부부(14.7개월)가 맞벌이부부(15.4개월)보다 더 빨리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통계청, 2016a).

이와 함께 혼인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도 자녀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박수미, 2008; 강성원, 박준, 손민중, 2010).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 교육(초등학생),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일)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은 20.6%(190만 6천 명)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신·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6b). 결혼·출산을 둘러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좀처럼 완화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는 자녀출산을 포기하거나 지연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출산 이후 돌봄자원의 활용 가능성은 자녀출산 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출산 이후 자녀돌봄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 혹은 남성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나야 한다면 자녀출산을 연기(또는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출산 후에도 자녀돌봄으로 인한 비자발적 노동시장 이탈의 가능성이 적다면 출산기피의 가능성이 또한 낮아질 수 있다. 자녀출산은 자녀양육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결정에 다각적인 고민이 수반된다. 만약 출산에도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자녀돌봄 제공자가 존재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그만큼 자녀출산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아의 경우 돌봄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보육시설이나 타인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더 큰 불안감을 갖고 있다¹⁾. 이 같은 불안감과 관련해 부모 외의 바람직한 주양육자로 조부모를 선택한 비율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서문희 등, 2009, 2012; 이윤진 등, 2015, p.10에서 재인용) 실제로 많은 이들이 비공식적 돌봄의 대표적인 유형인 조부모의 돌봄지원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컨대,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영·유아의 주된 돌봄자(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에 대해 기관(49.0%)과 어머니(41.3%), 그리고 (외)조부모(6.0%)를 꼽았으며, 영아의 경우 주된 돌봄자로 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같은 혈연을 주된 돌봄자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은설 등, 2016, p.82). 이와 함께 자녀 직접 돌봄에 대한 남편 이외의 양육지원자로 친정부모(21.9%)와 시부모(15.3%)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은설 등, 2016, p.99).

(외)조부모에 의한 육아지원은 최근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영아를 기준으로 (외)조부모에게 양육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4년과 2009년 각각 20.6%와 23.6%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그 비율이 35.1%에 달했다(서문희 등, 2005; 서문희 등, 2009; 서문희 등, 2012; 유희정 등, 2015, p.176에서

1) 돌봄공백에 대한 우려와 부담을 덜고자 정부는 시설중심의 보육·교육정책을 확대해 왔고 또 한편에서는 아이돌보미와 같은 공식적인 개별양육지원정책도 병행,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비공식적인 육아지원책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이윤진 등, 2015).

재인용). 또 다른 조사를 통해서도 자녀에 대한 돌봄조력자로서의 (외)조부모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유아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빈번하게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외)조부모를 꼽은 비율이 2010년 16.5%였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33.4%로 조사되었다(장혜경 등, 2015, p.394).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한국은 여전히 정부의 시설중심 보육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부모를 통한 비공식적인 육아지원이 보편화 되어있는 실정이다(이윤진 등, 2015). 이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부족함과 더불어 혈연에 의한 양육을 신뢰하는 우리사회의 정서가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2015)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조부모에게 위탁한 우선적인 이유가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32.3%)’와 ‘직장생활(또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서(31.6%)’라고 한다(이윤진 등, 2015, p.79). 따라서 출산 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자녀돌봄 제공자로 조부모가 기능할 수 있다. ‘할마(할머니와 엄마)’ 혹은 ‘할빠(할아버지와 아빠)’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나고(임연영, 2016), 유치원에서는 조부모 참여수업을 갖는다거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센터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자녀 사랑 요리교실’ 등이 개설되는 것은 손자녀를 돌보는 ‘황혼육아’가 증가하는 사회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비공식적 돌봄의 대표적인 유형인 조부모의 돌봄지원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영·유아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돌봄지원의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외조부모(=친정부모)의 돌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혜경 등, 2006, p.76; 이정원 등, 2012, p.134; 이윤진 등, 2015, p.61). 이와 함께 여성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자녀돌봄 방법으로 친정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희망하는 자녀돌봄 방법 또한 친정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난주 등, 2014, pp.170-174).

이러한 사회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친정부모(새로태어난 아이의 외조부모)’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양육지원 가능성과 혼인 후 첫째아 출산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외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 가능성 중 경제적 지원 가능성보다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양육제공 또는 긴급양육지원자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외조부모의 양육지원 가능성과 출산 간의 관계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외조부모의 특성 중 다양한 요인들이 그들의 손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양육제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영아의 경우 체력적 한계 등으로 장거리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 대부분의 경우 돌봄제공자가 주로 영아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양육을 제공하게 된다. 이같은 특성을 염두에 두고 친정부모와 자녀의 거주지 간 거리를 중요한 잣대로 삼아, 결혼을 통해 분가한 자녀(딸)와의 거리가 분가자녀의 혼인 후 출산을 얼마나 촉진(또는 지연)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II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후, III장에서는 분석 자료를 소개하고 해당 자료의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IV장에서는 친정과의 거리에 따른 결혼 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V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1. (외)조부모의 돌봄 지원과 출산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력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 중 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논의는 Leibenstein과 Becker의 고전적 업적들을 정리·발전시킴으로서 가능할 수 있었다. Leibenstein(1974)은 최초로 경제발전과정에서 향상되는 소득수준이 개인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김두섭, 2007, p.31). 그는 한 가구가 (n 번째) 자녀의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자녀에 의한 효용과 비효용(예컨대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 간의 비교에 바탕을 두고 가구 전체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가정하였다. 이런 가정에 따르면 자녀출산 또는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출산력이 저하되게 되며, 자녀출산 또는 양육비용이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경우 출산이 활발해 질 수 있다.

자녀 출산을 둘러싼 효용과 비용은 비단 해당 가구(부부)만의 문제를 뛰어 넘어 그들의 부모세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새롭게 태어날 자녀를 전적으로 부부가 돌볼 수도 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의 활용 그리고 조부모, 친인척

또는 육아도우미 등의 도움을 통해 양육할 수도 있다. 부모는 각각의 육아방식에 따른 경제적 지출 규모, 부모 및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 돌봄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각각의 비용이나 심리적 안정감 등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한 가정은 자녀 출산 후 직접육아에 따른 비용(C^d)과 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위탁하여 육아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심리적·물질적 비용(C_o^d) 그리고 조부모의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물질적 비용(C_p^d) 등을 고려하여 육아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육아비용에는 가시적인 보육비, 즉 순수 경제적 비용(C_1) 외에도 부모의 육아방식별 신뢰도(C_2),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 및 체감피로도(C_3), 조부모의 피로도(C_4) 등이 영향을 미치므로 $C_o^d(C_1^o, C_2^o, C_3^o, C_4^o \dots)$ 혹은 $C_p^d(C_1^p, C_2^p, C_3^p, C_4^p \dots)$ 와 같이 각각의 함수로 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본인이 자신의 자녀를 육아하는 것에 드는 비용을 C^d 라고 가정²⁾한다면, <식 1>과 같이 조부모의 손자녀돌봄에 대한 비용(C_p^d)이 보육시설 위탁에 의한 자녀돌봄(C_o^d)이나 부모 본인의 자발적 자녀돌봄(C^d)에 비해 발생하는 심리적·물질적 비용이 적을 때 다른 양육방식보다 조부모에 의한 자녀돌봄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조부모 세대의 생산성보다는 부모세대의 생산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조부모의 육아도우미로 부모세대의 노동력이 '자녀양육'에서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으로 이전(transfer)함으로써 두 세대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따른 특화를 기반으로 가구 내 분업(division of labor)을 설명한 Becker(1981)의 이론과도 맥을 같이한다. 특히 '부모 본인이 자신의 자녀를 육아하는 방식에는 자녀 양육을 위해 포기하는 부모의 사회활동 소득을 기회비용으로 고려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식 1>에서는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의 사회적 능력에 따라 부모가 고소득 노동자(high-skilled labor)인 경우($C_p^d \leq C_o^d \leq C^d$)와 저소득 노동자(low-skilled labor)인 경우($C_p^d \leq C^d \leq C_o^d$)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2) 자녀 양육과정에서 부모의 직접양육, 보육시설의 활용, 조부모의 돌봄 등 다양한 돌봄유형을 혼재하여 사용하거나 필요에 의한 때만 양육지원자로만 활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야간에는 부모의 양육이 주를 이루고, 낮시간 동안의 돌봄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부모의 직접돌봄, 보육시설을 통한 돌봄,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세 가지 유형을 통해 전일에 걸쳐 자녀를 돌보는 상황으로 가정하였다.

$$\begin{cases} C_p^d \leq C^d \leq C_o^d & \text{or} \\ C_p^d \leq C_o^d \leq C^d \end{cases} \quad \text{<식 1>}$$

이와 함께 가족 형성을 통한 다양한 이점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안중범 등, 2011, p.4) 자녀돌봄에 있어서도 조부모와 자원을 공유하는 경우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구 내에서 공공재의 성격³⁾을 가진 손자녀에 대해 조부모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양육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후생을 개선시킬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에 따라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 같은 논의를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조부모가구와 부모가구 간의 상황과 출산 간의 육아비용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부모가구와 부모가구 간의 육아비용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가구 간의 물리적 거리는 조부모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육아지원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영·유아돌봄의 경우에도 여타의 서비스와 같이 보관 또는 저장이 불가능한 소멸성(perishability)과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분리성(inseparability)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돌봄이 필요할 때 즉시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영아의 경우 장거리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 긴급상황이 빈번한 영아 돌봄의 경우 필요시 돌봄제공자의 근거리 거주가 돌봄지원을 가능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조부모가구와 부모가가 가까이 살고 있다면 자원의 높은 공유가능성, 이동에 따른 피로도 및 기회비용 감소 등으로 손자녀 돌봄지원을 위한 비용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들 것이며 돌봄제공의 적시성 또한 높ی 확보될 것이다.

조부모 세대와 자녀세대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전제 하에 조부모의 양육지원은 영·유아 돌봄에 있어 또 하나의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효율을 누릴 수 있는 세대 간 자원 이전(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이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 통로로 기능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자녀출산에 있어 가용한 돌봄자원의 하나

3) 예컨대 (손)자녀의 재물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 기쁨 등과 같은 이익은 해당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에게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도 있다.

로 조부모가 기능하기도 하며 실제로 상당수의 가구가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대 간 돌봄은 영유아 돌봄의 사회적 재구성 과정 이전(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비공식 돌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공보육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돌봄 유형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김윤정, 문순영, 2009).

앞선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신혼부부의 자녀출산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돌봄자원의 하나인 조부모와의 인접거주는 돌봄에 대한 부담이나 비용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 자녀출산을 촉진시킬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출산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조부모와의 거리 또는 조부모의 돌봄지원 가능성을 논의에 포함하게 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더욱 풍부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선행연구 고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외)조부모 돌봄이 자녀돌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까지는 (외)조부모의 돌봄가능성과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외)조부모의 돌봄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과 출산 간의 관계를 논의의 중심축으로 삼은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이를 다룬 일부 연구의 경우에도 실제 출산과의 관계보다는 출산의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다. 아울러 상당수의 연구는 단순히 친정/시부모의 생존여부를 돌봄 또는 가사노동의 조력가능성으로 설정하고 분석이 이루어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인숙(2005)은 경상남도 20개 시·군의 혼인기 미혼/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저출산을 야기하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관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혼기간(인구학적 변수), 소득수준(사회경제적 변수), 자녀의 필요성(가치관 변수)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과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우려가 자녀 출산 연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혜은과 진미정(2008)은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한 자녀만 있는 기혼여성 690명을 대상으로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하게 나타난 가운데 취업여성의 경우 친정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시어머니 생존여부의 경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모두에게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전현배와 이인재(2009)는 2004년도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의 1,14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시부모와 동거가 6세 이하의 자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부모와 동거하는 부부일수록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 최소자승법(OLS)에 의한 추정 및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구변수(IV)를 이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 추정 결과를 종합하여 부모와의 동거가 출산의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수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기혼자녀 부부가 부모와 동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풀이하였다.

김현식과 김지연(2012)은 한국노동패널(1~11차) 자료를 이용해 모든 부모(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동거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한 분석결과 가족구성원의 수를 통제하였을 때 모든 부모와의 동거는 자녀출산 가능성을 앞당기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결과는 아닌 가운데 친정어머니와의 동거만 출산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앞당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영선과 이영숙(2014)은 여성가족패널자료(KLoWF)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15~49세의 기혼여성 9,494명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통해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이 추가출산의향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와 관련된 변인은 주로 취업기혼여성의 추가출산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부모의 생존여부, 시부모와 동거여부 그리고 친정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 여부가 취업여성들의 추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조력여부는 출산계획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아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머니에 조력에 따른 가사일에 대한 부담 경감가능성보다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녀돌봄에 대한 이용가능' 여부가 추가출산 계획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풀이하였다.

이하나와 최영(2015)은 제3차 여성가족패널자료(KLoWF)를 이용하여 20~30대 가임

기 여성표본 2,001명을 대상으로 친정부모와 시부모가 자녀를 위한 비공식 돌봄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 자원의 존재여부가 기혼여성의 자녀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부모와 거주지가 가까울수록, 시부모와 관계가 원만할수록 출산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정부모 관련 특성은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기능 수행은 성인자녀의 경제활동 지속에 도움을 주며, 출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자원으로서 조부모를 활용하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 복지 국가들은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공식 돌봄 자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다(Bengtson & Roberts, 1991; Hank & Kreyenfeld, 2003; Hank & Buber, 2009; Igel & Szydlik, 2011; Becker & Steinbach, 2012; Tsai et al., 2011; 이하나, 최영, 2015에서 재인용).

이처럼 손자녀 돌봄을 둘러싼 조부모의 역할과 (손자녀) 출산 간의 관계를 살핀 국내외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논문들은 대부분 (외)조부모와 동거여부 또는 (외)조부모의 생존여부 정도를 자녀돌봄에 대한 지원가능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전현배와 이인재(2009)의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세대가 독립적인 주거 공간에 살지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와 같이 보다 구체화된 (외)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지원 가능성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종합하여 가장 중요한 비공식적 돌봄 자원 중 하나인 ‘친정부모(외조부모)’에 초점을 두고 친정부모의 손자녀 돌봄지원 가능성이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친정과의 거리(접근성)를 친정부모의 손자녀 돌봄지원 가능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설정하고 친정과의 거리가 신혼부부의 첫째아 출산 속도⁴⁾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4)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가임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시점은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출산 속도(tempo)의 변화는 출산력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은기수, 2005; 송헌재, 2012). 따라서 출산 속도나 출산시기에 대한 분석 또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참고자료 마련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분석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2000년 이후에 초혼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첫째아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KLIPS는 국내유일의 노동관련 가구패널조사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를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6). 조사가 지속됨에 따라 상당수의 표본들이 결혼, 출산과 같은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장기간 조사가 축적되고 있는 패널자료인 KLIPS를 이용하여 1차년도 당시 미혼인 여성(1차년도 당시 주로 10대였던 원가구의 여성자녀)을 추려내어 이후 그들의 '혼인'과 '출산'에 대해 분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당시 미혼인 여성 가운데 2000년(3차년도) 이후 초혼을 경험한 여성가구원 및 해당 여성의 가구자료를 이용해 친정과의 거리와 출산시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3차년도(2000년) 이후 자료로 한정된 이유는 2000년 이후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3차년도 조사부터 혼인상태의 변화 및 혼인시점(년/월)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혼인~출산' 간의 기간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KLIPS 3차~17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초혼을 경험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편과 친정특성을 고려하고 동시에 친정과의 거리까지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첫째아 출산속도에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LIPS의 가구번호 및 가구원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아내와 남편의 정보를 추출하였으며 3차~17차년도 자료 중 처음 결혼하였다고 응답한 가구(=결혼에 따른 분가가구)를 선별하였다. 친정과의 거리 등 친정과 관련된 자료는 새롭게 혼인한 여성의 원가구 번호를 이용해 '원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친정부모)' 자료를 생성하였고 혼인 이전에 출산을 경험한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친정과 신혼가

구 간 별도의 경제상태 등을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혼인을 통해 친정과 별도의 가구를 형성한 경우(분가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⁵⁾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894명의 신혼여성(및 그들의 남편과 친정)에 대한 자료를 생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혼인~첫째아 출산 시점사이의 기간에 친정과외의 거리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변수의 구성

본 연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친정과외의 거리가 첫째아 출산 속도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월(月) 단위로 측정된 ‘혼인 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을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0년 이후 초혼을 경험한 부부를 추출하여 가구정보를 병합시킨 후 그들이 응답한 ‘혼인일자’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의 첫째아로 응답된 표본이 있는 경우 첫째아의 생년월을 추출하여 둘 사이의 기간을 종속변수(=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로 설정하였다.

앞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출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중심으로 통제변수들을 구성하였는데 같은 요인(예컨대, 소득수준)이라 할지라도 아내와 남편 간 또는 신혼가구와 친정 간에 그 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이라 판단하여 혼인당시(혼인시점의 코호트)를 기준으로 아내의 특성과 남편의 특성, 그리고 신혼가구의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혼인당시를 기준으로 아내와 남편의 연령 및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수준을 모형에 포함시켰으며 가구특성과 관련해서는 신혼가구의 소재지, 부부 간 연령 차이를 고려하였다. 더불어 친정의 특성도 함께 고려하였는데 친정의 소득수준, 친정부모의 생존여부, 친정소재지 등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연령은 2차항의 형태로 제곱항을 동시에 포함시켰으며 교육수준은 2000년 이후 혼인한 이들의 대다수가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고졸이하/전문대졸/대졸이상의 세 가지 범주로 가변수(dummy)를 생성하였다. 소득의 경우 만원 단위로 측정된 아내와 남편의 월 소득을 각각 이용하되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5) 친정부모를 모시고 사는 신혼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매우 드물고, 조부모가구의 특성과 부모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복잡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분석결과를 왜곡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친정부모를 모시고 사는 신혼부부는 배제하고 혼인을 통해 친정에서 분가한 자녀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구별로 혼인시점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금액과 관련된 변수들은 2010년을 기준(2010년=100)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실질화시켜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혼인당시 소득이 0인 응답자(미취업자)의 탈락을 막기 위해 소득이 0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환산한 후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지역의 경우 대도시(서울 또는 광역시)와 그 외의 지역을 구분하는 가변수(dummy)를 통해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친정과의 거리와 관련해서 우선 각 가구의 주소자료를 구축한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부분의 통계조사가 그러하듯 KLIPS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가구의 세부주소까지는 공표되지 않는다. 다만 각 가구의 주소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市郡區) 수준까지는 공표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바탕으로 각 가구가 속한 최소 행정단위의 행정기관의 코드를 추출하여 이를 해당 가구의 주소로 삼았다. 이렇게 추출된 각 가구의 주소(해당 가구가 속한 시/군/구청 코드)를 좌표화하여 가구의 위치변수를 생성하였다. KLIPS 코드북에 제시되어 있는 시/군/구청의 좌표는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고, 주소에 대해 위도·경도로 변환시켜주는 인터넷사이트(<http://mygeoposition.com/>)를 통해 위도·경도 정보로 변환시켰다. 변환된 위도·경도 정보를 이용하여 SAS에 내장된 GEODIST함수(위도·경도를 통해 거리를 산출하는 함수)를 활용하여 분가를 통해 형성된 신흥가구와 친정 간 직선거리를 산출하였다.

그림 1. 구청 좌표의 획득 - 강북구청의 예



출처: MyGeoPosition.com(<http://mygeoposition.com/>)

이렇게 산출한 친정과의 거리 변수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혼인가구와 친정 간의 ① 직선거리(km)뿐만 아니라 ② 혼인가구와 친정이 동일 광역자치단체(16개 광역시·도)에 속하는지 여부 그리고 ③ 친정과의 거리를 범주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3. 기초통계분석

KLIPS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초혼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에 사용할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대상 894가구 중 755가구가 출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을 경험한 가구의 혼인 후 출산까지의 기간은 평균 19.85개월(약 1.66년)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출산(출산력 또는 출산속도 등)과 관련된 것으로 언급되어 본 연구에서도 통제변수로 활용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혼인당시를 기준으로 아내는 27.8세, 남편은 30.1세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내의 경우 대졸 이상이 3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이 각각 35.2%와 27.7%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남편의 교육수준 또한 대졸 이상이 4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이 각각 31.5%와 21.5%를 기록하였다.

혼인 당시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실질화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내의 월평균 소득은 84.5만원이었으며 남편의 경우 227.8만원이었다. 다만 이 같은 차이는 결혼을 전후해서 상당수의 여성(아내)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함에 따라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혼인 당시 코호트를 기준으로 남편의 경우 94.2%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내의 경우 48.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혼인당시의 아내와 남편의 월평균 소득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신혼가구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절반이 조금 넘는 51.0%가 대도시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있었으며 부부 간 연령차이의 절대값은 2.7세로 나타났다. 친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81.1%는 친정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1%가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그 비율이 신혼가구에 비해 약간 높았다.

표 1.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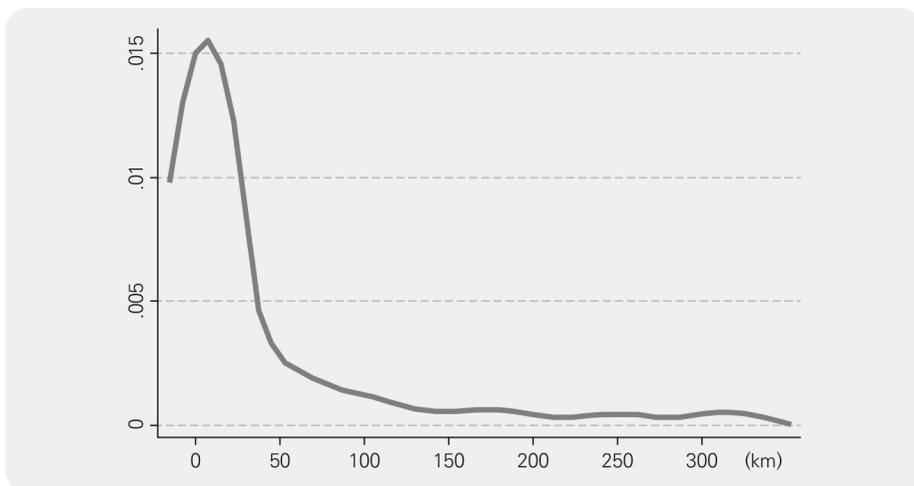
변수특성	변수설명	평균 또는 %	표준편차 또는 빈도
종속변수	혼인~출산까지의 기간(月)	19.852	17.030
	연령	27.786	3.091
	연령 ² ÷100	7.816	1.770
	교육수준(년)	14.180	1.887
혼인당시 아내특성	아내교육수준: 대졸 이상	37.0%	331
	아내교육수준: 전문대졸	27.7%	248
	아내교육수준: 고졸 이하	35.2%	315
	ln(월소득)	2.393	2.563
	월소득(만원)	84.529	105.793
혼인당시 남편특성	연령	30.102	3.452
	연령 ² ÷100	9.180	2.171
	교육수준(년)	14.558	2.017
	남편교육수준: 대졸 이상	47.0%	420
	남편교육수준: 전문대졸	21.5%	192
	남편교육수준: 고졸 이하	31.5%	282
	ln(월소득)	5.087	1.325
	월소득(만원)	227.750	132.401
신혼가구 특성	신혼가구소재지(서울 또는 광역시=1)	51.0%	456
	부부 간 연령차(세)	2.709	2.428
혼인당시 친정특성	ln(가구소득)	5.053	1.668
	양친생존여부	81.1%	725
	친정소재지(서울 또는 광역시=1)	54.1%	484
	동일 광역자치단체 분가여부	66.8%	597
친정과의 거리특성 ⁶⁾	① 근접거주(0~10km 미만)	55.6%	497
	② 동일 기초자치단체권역 거주 (10km 이상~20km 미만)	12.1%	108
	범주화한 ③ 인근 기초자치단체권역 거주 (20km 이상~50km 미만)	10.7%	96
	거리 ④ 동일 광역자치단체권역 거주 (50km 이상~100km 미만)	8.7%	78
	⑤ 타 광역자치단체 권역 거주 (100km 이상)	12.9%	115
	ln(친정과의 거리)	2.015	1.926
	거리(km)	38.749	72.148
	N	894	

주: '혼인~출산까지의 기간(月)'의 경우 N=755

6) 본 연구에서 범주화한 거리(10km, 20km, 100km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 다만 행정구역의 면적을 통해 그와 같이 구분하였는데, 각 행정구역의 면적 통계(통계청, 2016c)에서 15개 광역자치단체(제주도 제외 및 세종시를 충청남도에 포함)의 면적은 평균 6,563km²,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친정과의 거리와 관련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혼부부의 2/3가량(66.8%)은 친정부모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 신혼가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정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38.7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분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55.6%의 신혼가구는 친정과 10km 미만의 거리에 위치하였으며, 12.1%는 친정과의 거리가 10km~20km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7%의 가구는 50km~100km 사이에 위치하였으며, 12.9%의 신혼부부는 친정과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신혼집을 마련하였다.

그림 2. 분가가구의 혼인당시 친정과의 거리 분포



이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친정과의 거리의 분포를 [그림 2]와 같이 커널밀도함수

면적은 평균 $434km^2$ 였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이 원(circle)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가정하고 해당 넓이에 대한 지름을 구해보면 각각 91.4km와 23.5km가 도출된다. 이러한 수치에 기초하여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크기를 지름이 20km와 100km인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가까이 모여 사는 ‘인근접거주’라는 개념을 소개한 연구(최정민, 2014; 2016)에서는 일본의 경우 “국물(soup)이 식지 않는 거리” 정도로 ‘인근접거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해당 연구에서는 ‘도보, (동력)자전거, 자동차,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과는 관계없이 편도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는 가정’을 ‘인근접거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Kernel density function)를 통해 시각화하여 살펴보았다. 기초통계 분석에서의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신혼부부가 친정과 동일한 행정구역(0km)에 신혼가구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신혼 가구도 대부분 50km 미만 거리에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혼가구의 친정과의 거리분포는 [그림 2]와 같이 양(+)의 왜도를 가진, 우측으로 꼬리가 긴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제 분석에서는 정규화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 형태를 취한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IV. 친정과의 거리와 신혼부부의 출산 이행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첫째아 출산 이행기간에 대한 기저생존함수(baseline survival function)를 확인하기 위해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하여 결혼 지속기간에 따른 자녀 출산 이행속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신혼가구가 친정부모와 동일한 광역행정구역에 위치하는지에 따른 자녀출산 이행기간 차이를 살펴보고 이어 친정과의 거리 범주별로 첫째아 출산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Kaplan-Meier 추정방법은 특정 상태의 변화 발생(=사건의 발생)에 따라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승법극한(product-limit)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상태의 변화가 해당 측정 시점(t)을 지나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한준, 2005; 오지혜, 임정재, 2016에서 재인용).

$$G(t) = l: \tau_l < t \left(1 - \frac{E_l}{R_l} \right) \quad \text{<식 2>}$$

(E_l : 시점 τ_l 에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의 수, R_l : 시점 τ_l 에 위험집합에 속해있던 경우의 수)

여기서는 첫째아가 태어난 경우 사건(event)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결혼 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이 생존기간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존기간은 월(月) 단위로 환산한 기간을 이용하였으며 표본이탈 등의 사유로 우측으로 절단된(censored)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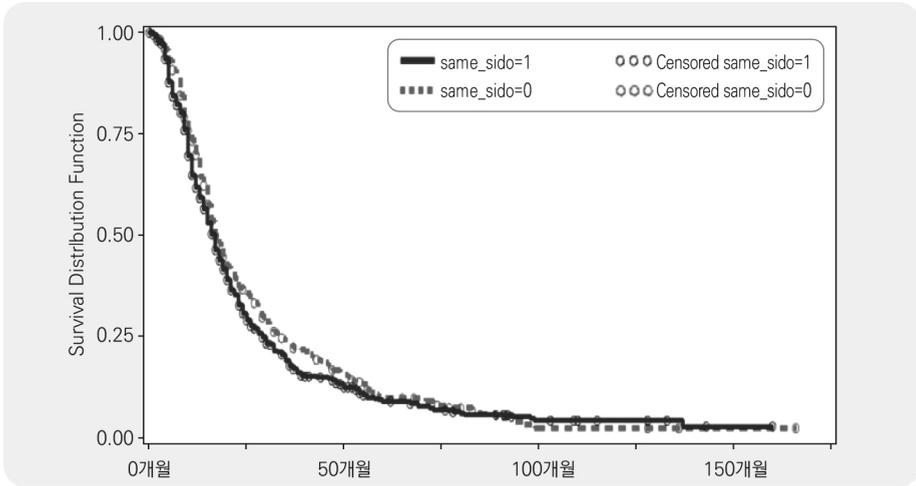
(최종조사 시점까지 무자녀 상태인 경우 중도절단된 것으로 간주)에 대해서는 절단된 변수임을 나타내는 가변수(dummy variable) 생성하여 구분하였다. 사건의 발생(여기서는 출산)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친정과 동일한 광역행정구역 거주여부에 따른 자녀 출산 이행 기간 차이를 살펴 보도록 하자. [그림 3]은 친정과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 혼인을 통한 분가가구가 위치하는지에 따라 첫째아 출생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Kaplan-Meier Curve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가로축은 혼인 후 경과기간(月이며, 세로축은 생존확률(=무자녀 상태로 남아있을 확률)을 의미한다.

친정과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에 신혼가구를 마련한 가구(=실선)와 그렇지 않은 가구(=점선)들의 생존함수를 신혼가구의 친정과 동일 광역행정구역 거주 여부에 따른 자녀 출산 이행 기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혼인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누적되어 가는 가운데 친정과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에 신혼가구를 마련한 가구의 경우 생존함수가 (비록 85개월 무렵 이후에는 그렇지 않지만) 더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친정과 동일 광역행정구역에 위치할 경우 더 빨리 자녀를 출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Kaplan-Meier Curve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살피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Wilcoxon test 결과⁷⁾ 이 같은 시각적 차이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11$).

7) 집단별 Kaplan-Meier Curve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살피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Log-Rank 검정이 비교적 널리 쓰인다. Log-Rank 검정은 각 집단의 생존확률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나왔으며, 생존곡선이 비례적인 형태를 보일 때 널리 활용된다. Log-Rank 검정에서는 모든 시점의 평균을 단순 합산시켜 계산이 이루어지는 반면 Wilcoxon test에서는 초기 사건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집단 간의 생존확률을 비교하고자 할 때 각 시점에서 대상자수로 가중하여 계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본의 이탈 등으로 절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Wilcoxon test가 적합하며 생존곡선이 서로 엇갈리는 형태를 보일 때도 더 나은 검정결과를 보여준다(박진경 등, 2010).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본이탈 등으로 표본이탈이 어느 정도 발생함과 동시에 집단 간 생존곡선이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본 연구에서는 Wilcoxon test를 이용하여 집단 간의 출산 이행에 대한 생존곡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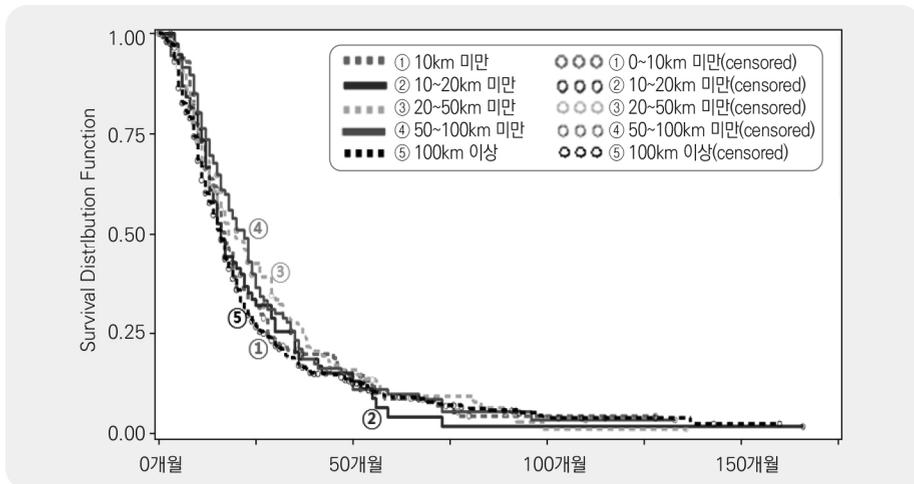
그림 3. 혼인 당시 친정과의 동일 광역행정구역 여부에 따른 첫째아 출산 이행 기간 (Kaplan-Meier Curve)



이어 친정과의 거리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친정과의 거리에 따라 자녀출산 속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4]는 ① 근접거주(0~10km 미만), ② 동일 기초자치단체권역 거주(10km 이상~20km 미만), ③ 인근 기초자치단체권역 거주(20km 이상~50km 미만), ④ 동일 광역자치단체권역 거주(50km 이상~100km 미만), ⑤ 타 광역자치단체권역 거주(100km 이상)와 같이 친정과의 거리를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각 계층(strata)별로 자녀 출산 속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도식화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각각의 선이 겹치게 나타나며, 거리의 범주별로 비례하여 출산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아 친정과의 거리에 완전히 비례하여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친정과 가장 가까운 집단에 속할 경우 자녀를 빨리 출산함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시각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살피기 위한 Wilcoxon test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분석되었다($\chi^2=10.48$).

그림 4. 혼인당시 친정과의 거리 범주별 첫째아 출산 이행 기간(Kaplan-Meier Curve)



1. 첫째아 출산 이행기간에 대한 분석: 콕스 비례위험모형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한 사건발생에 대한 위험률 차이 분석의 경우 각 계층(strata)별로 사건(event) 이행 가능성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외의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요인에 대해 몇 가지 계층(strata)에 따른 차이 정도만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앞서 제시한 [그림 4]와 [그림 5]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들은 통제하지 못한 채 ‘친정과의 거리’만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단편적으로만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혼인과 출산이라는 두 사건 간의 시간간격(time interval)은 친정과의 거리 외에도 다양한 요인(factor)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한 분석은 결혼 생활을 둘러싼 다른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양한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에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 널리 이용된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중도절단된(censored) 관측치를 배제하고 분석이 이루어져 중도절단이 발생한 경우(여기서는 무자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본들이 제외되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콕스의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선택할 수 있다.

앞에서 Kaplan-Meier 방법을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본 친정과의 거리와 자녀출산 속도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가 출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존분석에서 자주 언급되는 위험함수(hazard function)는 임의의 시점(t)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한다. 해저드 함수 $h(t)$ 는 사건(T)이 관찰시점(t)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 관찰하고자하는 사건이 해당 시점 t 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탈출확률이 된다(김양진, 2013). 여기서는 혼인 후 첫째아가 출생한 경우 사건(event)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1의 값을 부여하였고, 최종 조사시점까지 자녀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에 0으로 처리하였다.

$$h(t) = \lim_{h \rightarrow 0} \frac{Pr[t \leq T \leq t+h | T > t]}{h} \quad \text{<식 3>}$$

비례위험모형에서는 사건발생확률에 대한 특정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도 사건의 발생위험(hazard)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독립변수 벡터를 X 로 보고, 계수를 β 라고 하면, 비례위험모형에서 관측시점(t)에서의 해저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h(t) = h_0(t) \exp(X' \beta)$$

여기서 $h_0(t)$ 는 기본해저드(baseline hazard)를 나타내며, 기본위험은 독립변수의 값이 0($X = 0$)일 때, 시점 t 에 사건이 일어날 조건부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례위험 회귀모형에서는 매 시점의 위험수준은 기본위험에 의해서 결정되고 독립변수(X)는 시점(t)에 관계없이 기본위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임유진, 2016). 여기서는 회귀계수의 부호가 (+)인 경우 해당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빨리 출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수의 부호가 (-)인 경우에는 해당 독립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산으로 천천히 이행함을 뜻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자녀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의 설명력과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자녀출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의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모형을 설계함에 있어 남편과 아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제·사회적 변수들을 동시에 포함시켰으며 가구의 특성도 함께 모형에 투입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친정과의 거리를 포함시켰으며, 친정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친정과의 거리 변수는 자녀 출산과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특성을 달리하여 세 가지의 모형을 설계하였다. 동일한 통제변수 하에 동일 광역자치단체 거주여부([모형 I])와 5가지의 범주로 구분한 친정과의 거리를 포함한 모형([모형 II]) 그리고 자연로그를 취한 형태의 거리 연속형 변수([모형 III])를 포함시킨 세 가지 모형을 통해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세 가지 모형에서 계수값의 부호나 통계적 유의도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모형 I]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내의 교육수준과 관련한 가변수의 경우 전문대를 졸업한 집단에 속할 경우 기준변수인 고졸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이들에 비해 1.25배($=e^{0.258}$) 가량 빨리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당시를 기준으로 고소득의 아내일수록 자녀출산을 지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편연령의 경우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가 각각 (+)과 (-)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 계수값을 이용하여 변곡점을 계산한 결과 혼인 당시 연령이 만30세까지는 혼인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를 빨리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후의 연령층에서는 연령 및 연령제곱과 관련한 계수값을 통해 계산된 기울기의 값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작아져 상대적으로 늦은 혼인연령에 따른 자녀출산 따라잡기가 연령에 비례해서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편의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경향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관찰되지는 않았으며 혼인당시 남편의 소득의 경우 (+)의 방향을 나타내어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빨리 출산할 가능성을 엿볼 수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다.

신혼가구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신혼가구 소재지 변수가 [모형 II]에서만 5%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었다. [모형 II]를 기준으로 대도시에 신혼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16.8%($=1 - e^{-0.184}$) 정도 늦게

첫째아를 출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친정특성과 관련한 변수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값을 나타내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친정과의 거리와 관련한 변수들의 결과값을 살펴보면 우선 [모형 I]의 친정과 동일광역시도로의 분가여부 변수의 경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친정과 동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분가한 신혼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자녀를 출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여타의 조건이 일정하다면 친정과 동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분가한 가구는 타광역자치단체로 분가한 가구에 비해 1.19배($=e^{0.174}$) 가량 빨리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혼가구의 친정과의 거리에 대해 다섯 가지의 범주(①근접거주(0~10km 미만)~⑤타 광역자치단체 권역 거주(100km 이상))로 된 친정과의 거리변수를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한 [모형 II]에서는 친정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들이 모두 (-)의 값을 나타내어 기준변수인 ‘근접거주(0~10km 미만)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녀를 늦게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는데 일정한 거리 내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손쉽게 친정부모의 자녀돌봄 지원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리 내에서는 친정부모와 가까운 범주에 거주할수록 자녀출산이 촉진되지만 현실적으로 일상적 방문 또는 돌봄지원이 용이하지 않은 거리(여기서는 50km 이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이용교통수단의 차이(및 이에 따른 방문소요 시간의 차이) 등으로 친정부모와의 절대적인 거리에 비례하는 형태로 자녀출산 속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친정과의 거리가 ‘동일 기초자치단체권역 거주’ 범주에 속하는 경우 기준변수인 ‘근접거주 집단에 비해 21.4% 정도 늦게 첫째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보다 먼 ‘인근 기초자치단체권역 거주’ 범주에 속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근접거주’ 집단에 비해 21.9% 가량 늦게 출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친정과의 거리와 첫째아출산 이행(Proportional hazard model)

호이당시 특성	[모형 I] 친정과 동일 광역자치단체 거주 여부에 따른 자녀 출산이행 기간 분석				[모형 II] 친정과의 거리 범주에 따른 자녀 출산이행 기간 분석				[모형 III] 친정과의 거리에 따른 자녀 출산이행 기간 분석			
	추정치 (β)	표준오차	χ ²	Hazard Ratio	추정치 (β)	표준오차	χ ²	Hazard Ratio	추정치 (β)	표준오차	χ ²	Hazard Ratio
연령	-0.144	0.198	0.530	0.866	-0.116	0.199	0.340	0.891	-0.143	0.197	0.524	0.867
연령 ² × 100	0.296	0.346	0.735	1.345	0.249	0.347	0.515	1.283	0.294	0.345	0.724	1.341
아내 아내교육수준	0.074	0.108	0.466	1.077	0.073	0.108	0.455	1.076	0.094	0.108	0.766	1.099
특성 아내교육수준	0.258***	0.100	6.663	1.295	0.254**	0.101	6.341	1.289	0.265***	0.100	6.981	1.303
아내교육수준	-	-	-	-	-	-	-	-	-	-	-	-
아내교육수준	-	-	-	-	-	-	-	-	-	-	-	-
ln(월소득)	-0.089***	0.015	35.394	0.915	-0.089***	0.015	35.513	0.915	-0.088***	0.015	34.679	0.916
연령	0.353**	0.144	6.044	1.423	0.344**	0.143	5.763	1.411	0.348**	0.143	5.924	1.417
연령 ² × 100	-0.596***	0.231	6.668	0.551	-0.583**	0.231	6.381	0.558	-0.589**	0.230	6.531	0.555
남편 남편교육수준	-0.084	0.106	0.625	0.920	-0.085	0.106	0.640	0.919	-0.096	0.105	0.831	0.908
특성 남편교육수준	0.059	0.108	0.298	1.061	0.055	0.108	0.256	1.056	0.052	0.108	0.234	1.054
남편교육수준	-	-	-	-	-	-	-	-	-	-	-	-
ln(월소득)	0.020	0.029	0.461	1.020	0.027	0.029	0.828	1.027	0.024	0.029	0.657	1.024
신혼가구 소재지(서울 또는 광역시=1)	-0.172*	0.091	3.580	0.842	-0.184**	0.091	4.135	0.832	-0.169*	0.089	3.560	0.845
특성 부부 간 연령차	0.018	0.032	0.315	1.018	0.018	0.032	0.309	1.018	0.018	0.032	0.306	1.018
ln(가구소득)	0.035	0.023	2.319	1.035	0.031	0.023	1.889	1.032	0.032	0.023	2.020	1.033
친정 양친/생존여부	-0.078	0.099	0.623	0.925	-0.070	0.099	0.492	0.933	-0.075	0.099	0.570	0.928
특성 친정소재지 (서울 또는 광역시=1)	0.076	0.089	0.728	1.079	0.087	0.089	0.961	1.091	0.071	0.088	0.642	1.073
친정과의 동일 광역자치단체 분가여부	0.174**	0.080	4.700	1.190	-	-	-	-	-	-	-	-

혼인당시 특성	[모형 I] 친정과 동일 관역자치단체 거주 여부에 따른 자녀 출산이행 기간 분석				[모형 II] 친정과의 거리 범주에 따른 자녀 출산이행 기간 분석				[모형 III] 친정과의 거리에 따른 자녀 출산이행 기간 분석			
	추정치 (β)	표준오차	χ^2	Hazard Ratio	추정치 (β)	표준오차	χ^2	Hazard Ratio	추정치 (β)	표준오차	χ^2	Hazard Ratio
① 근접거주 (10km 미만, 기준변수)	-	-	-	-	-	-	-	-	-	-	-	-
② 동일 기초자치단체권역 (10km 이상-20km 미만)	-0.241**	0.117	4.232	0.785	-	-	-	-	-	-	-	-
③ 인근 기초자치단체권역 (20km 이상-50km 미만)	-0.247**	0.123	4.058	0.781	-	-	-	-	-	-	-	-
④ 동일 광역자치단체권역 (50km 이상-100km 미만)	-0.091	0.135	0.451	0.913	-	-	-	-	-	-	-	-
⑤ 타 광역자치단체-권역 (100km 이상)	-0.154	0.117	1.710	0.858	-	-	-	-	-	-	-	-
ln(친정과의 거리)					-0.039**	0.020	3.865	0.962				
모형검정 통계량	-2Log L	8897.654	8894.920									8898.540
	AIC	8929.654	8932.920									8930.540
	SBC	9003.681	9020.828									9004.568
귀무가설 검정 통계량	Likelihood Ratio	61.917***	64.650***									61.030***
	Score	61.422***	64.433***									60.880***
	Wald	60.802***	63.661***									60.283***
N		894	894									894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친정과 동일한 광역시도로의 분가여부 변수 대신 친정과외의 거리에 대해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포함시킨 [모형 III]에서는 거리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추어 여타의 조건이 일정하다면 친정과외의 거리가 가까운 신혼부부일수록 자녀를 빨리 출산할 가능성이 높음을 엿볼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첫째아 출산속도(혼인 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는 소득수준이나 연령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과외의 거리와 관련해서는 여타의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친정과 가까운 곳으로 분가한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자녀를 출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일정한 거리 내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손쉽게 친정부모의 자녀돌봄 지원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리 내에서만 친정과외의 거리가 자녀의 출산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었다.

V. 결론 및 함의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소가족 가치와 규범의 광범한 확산으로 한국의 출산력은 지속적인 저하를 거듭하였고, 2000년대 진입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김두섭, 2007).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경제성장 둔화 문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심화,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 등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김태홍 등, 2011) 속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양한 요인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에 따른 가정내 돌봄자원의 공백 또한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라는 직접적인 원인 외에도 소가족의 보편화라는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일정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95년 41.3%에 달하던 노인 자녀동거율은 2005년과 2015년에 각각 29.2%와 24.6%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통계청, 2017)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부모 세대와 자녀세대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전제 하에 출산 이후 자녀에 대한 든든

한 돌봄자원의 활용가능성은 자녀출산 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출산 후에도 자녀돌봄으로 인한 비자발적 노동시장 이탈의 가능성이 적다면 그만큼 출산기피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OECD 등의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은 공식적인 보육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상당수가 가족 등에 의한 비공식적 자녀돌봄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비공식 돌봄 중 상당부분을 외조부모의 육아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상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외조부모의 돌봄 가능성과 혼인 후 첫째아 출산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외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제공 가능성에 대해 분가한 신혼부부와 친정간의 거리(distance)를 하나의 중요한 잣대로 삼아 결혼을 통해 분가한 자녀와 친정 간의 거리가 분가자녀의 출산을 얼마나 촉진(지연)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친정과 가까이 살수록 자녀를 빨리 출산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 여타의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친정과 동일한 지역에 신혼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를 빨리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정과의 직선거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도 친정과 가까울수록 자녀를 빨리 출산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친정부모와의 주거거리가 친정부모의 자녀돌봄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여 자녀의 출산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친정과의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거리에 따른 출산속도의 차이가 비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무조건적으로 친정과의 거리에 비례해 출산 촉진(또는 지연)이 이루어진다고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거리 내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손쉽게 친정부모의 자녀돌봄 지원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리 내에서만 친정과의 거리가 자녀의 출산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조부모의 '황혼육아'는 엄마 혹은 아빠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경력단절문제 등을 완화시키는데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혼자녀에게는 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조부모에게는 노년기에 손자녀 돌봄과 같은 보람된 일을 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등 세대 간 공생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이하나, 최영, 2015). 물론 자녀 출산 및 양육방식의 결정이 해당 가족의 의사결정 영역임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혈연에 의한 양육을 그 어떤 공식적 양육방식보다 더 신뢰하는 우리의 정서를 바탕으로 (외)조부모에 의한 자녀돌봄은 해당가구가 '선택한 결과'이며 그러한 선택에 대한 사회적 고민

또는 지원방안을 찾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돌봄자원의 공백으로 인해 출산이 지연(또는 기피)되고 그러한 의사결정이 모여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결과가 머지않은 미래에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임을 감안한다면 출산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배호중, 한창근, 2016). 이와 함께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도 조부모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을 가능성이 큰 부모세대들을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시킨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의 빈곤, 심리적 불안정 문제 등이 보다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의 하나로도 (외)조부모의 돌봄 자원에 대한 보다 나은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아동돌봄의 공식적 지원정책인 보육정책의 중요성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공식적 아동 돌봄 서비스의 무조건적인 확대만이 보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지닌 부모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대안은 아닐 수 있다(이하나, 최영, 2015). 또한 단시간에 공식적 돌봄 자원의 급속한 양적·질적 확충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공식적 돌봄 자원과 함께 비공식 돌봄 자원의 조화로운 역할 분배가 필요한데 정책수요자로 하여금 자녀돌봄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이윤진 등, 2015).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조부모 세대와 자녀세대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전제 하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부모에 의한 돌봄을 선택한 경우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조부모의 돌봄에 대한 공적인 관리 및 보상체계의 설계, 그리고 돌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거주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3세대 가구(부부+자녀+손주)의 동거나 인근접거주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최정민, 2016). 육아문제와 고령층 문제를 동시에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가정보육수당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손자녀 돌봄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손자녀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대간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조부모에 의한 돌봄에 따른 우려(예컨대 조부모를 통한 육아의 경우 아동의 '교육적 성취'가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세대가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세대통합형 주택 공급의 활성화나 인근

접 거주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다만 인근접 거주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가사 간섭이나 사생활 침해를 꼽는 이들의 비중이 높고(최정민, 2014) 노인 자녀동거율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사회상을 감안할 때 합가형태의 세대 간 동거만을 무조건적으로 장려하기 보다는 노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각자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되 필요시에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김태섭, 2016)⁸⁾의 보급이나 노부모 세대에 인접한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임대료 지원과 같은 혜택 제공을 통해 세대 간 인접지역 거주를 통해 아동돌봄 및 경력단절문제 그리고 노인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로 젊은층의) 인구 유출이 많고 고령층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노부모 세대 근처로 이주하는 경우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젊은 부부들의 인구유입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셋째, 출산과 육아를 위한 ‘출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기 근무단축제도’ 등은 근로자의 권리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의무화된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생산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친정부모와 결혼을 통해 분가한 자녀와의 거리가 분가자녀의 출산결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뢰성 있는 육아여건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신뢰성있는 육아로 대표되고 있는 조부모를 통한 자녀 돌봄이 결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자녀육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조부모를 통한 사적돌봄은 현실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적돌봄의 정책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현실성 있는 대안일 뿐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적·공적 돌봄 지원에 앞서 장기적인 일·육아 양립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480일의 출산휴가와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간병휴가, ‘daddy quota’⁹⁾를 통해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가정탁아, 파트타임유치원 등 부모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육아형태를 인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8) 높은 주택가격과 임차가구의 임대료 상승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가구(독거, 노인부부)증가와 사회초년생, 젊은층이 新 주거취약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노인가구와 젊은층 가구의 증가와 주거문제 심화, 이에 따른 정부정책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기혼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혼합하여 거주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정책을 통해 주거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태섭, 2016).

9) 남성의 육아참여 및 여성과의 동등한 양육책임을 유도하기 위해 부모는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남성은 의무적으로 2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승연, 2014).

이를 통해 2000년 이후 실제 스웨덴 내 출산율이 증가하였다(고승연, 2014).

현재 우리 사회는 조부모를 통한 사적 자녀돌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부모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돌봄자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논의를 위해,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 가능성의 하나로 친정부모를 염두에 두고 친정부모와 결혼을 통해 분가한 자녀의 거리가 분가자녀의 첫째아 출산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를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내 돌봄자원의 공백 방지 차원으로서 (외)조부모 돌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친정부모의 자녀돌봄 지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에서 친정부모와의 인근접 거주 가구가 자녀출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부모의 돌봄에 대한 정책발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서의 인근접 거주에 대한 필요성을 양방향으로 동시에 논의하였다. 다만 이용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는 친정부모만을 선택하여 분석하고 있고 시부모 또한 손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자로 활약할 수 있지만 이들은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실제 거주지가 아닌 시/군/구 단위의 행정기관의 주소 거주지로 삼아 분석을 실시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보다 상세한 행정자료 등이 제공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친정과의 거리를 도출함에 있어 실제 교통상황 또는 대중교통 등의 이용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수리적으로 산출된 직선거리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과 혼인 이후 이사를 경험한 가구 등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남는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보다 일반화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친정과의 거리와 자녀 추가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의도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흥미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성원, 박준, 손민중. (20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 CEO information, 752, pp.1-25.
- 고승연. (2014).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우다 - 저출산 개선을 위한 5가지 해법, VIP Report, 564, pp.1-21.
- 고은현. (2011). 기혼여성의 경제적 효용과 일·가족 양립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별 차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난주, 강민정, 박건표, 전병유, 강문정. (2014). 2014년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두섭. (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파주: 집문당.
- 김윤정, 문순영. (2009). 영유아 돌봄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8(2), pp.221-260.
- 김양진. (2013). 생존분석. 파주: 자유아카데미.
- 김은설, 유해미, 최은영, 최효미, 배운진, 양미선, 김정민.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세종: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김일옥, 왕희정, 정구철, 최소영. (2011). 출산장려 정책과 근로시간이 기혼여성의 둘째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4(3), pp.139-156.
- 김태섭. (2016). 세대통합형 주택공급 활성화의 필요성, 서울: 주택산업연구원.
- 김태홍, 김동식, 김은지, 배호중, 민현주. (2011).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식, 김지연. (2012). 부모동거가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2(3), pp.5-32.
- 대한민국 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서울: 대한민국 정부.
- 박수미. (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pp.59-77.
- 박진경, 오광호, 김민수. (2010). 생존분석기법을 이용한 건설업과 타 업종간의 부도율 비교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1(4), pp.747-756.

- 배정연, 홍석자. (2010). 기혼직장여성의 출산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7(1), pp.131-150.
- 배호중, 한창근. (2016).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3), pp.204-238.
- 서문희, 백화중, 이옥,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보고. 서울: 여성부.
- 서문희, 김은설, 최진, 안재진, 최혜선, 김유경, 조애저. (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이혜민. (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송헌재. (2012).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구의 출산결정요인 분석. 응용경제, 14(3), pp.51-78.
- 안종범, 우석진, 민현주, 류연규, 황남희, 김하나, 서민지, 김병권. (2011). 가족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가족정책효과 분석. 서울: 여성가족부.
- 오지혜, 임정재. (2016). 한국 미혼 남녀의 결혼 시기와 결혼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50(5), pp.203-245.
- 유희정, 이솔, 홍지수. (2015). 맞벌이 가구의 영아양육을 위한 조부모 양육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은기수. (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갖는 의미. 보건복지포럼, 102, pp.25-35.
- 이삼식, 최효진, 송민영, 서문희, 신화연, 고선주 등. (2015).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진, 권미경, 김승진. (2015).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인숙. (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pp.67-90.
- 이정원. (2007).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합리적·가치적 선택 모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정원, 도남희, 김세현, 나지혜. (2012).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 내실화 방안(II): 가정 내 영아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
구소
- 이하나, 최영. (2015). 비공식적 돌봄 자원이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 조부
모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2), pp.262-288.
- 임언영. (2016.6.7.). 육아의 新중심 ‘할마와 ‘할빠’, *여성조선*.
<http://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4&nNewsNumb=20160558456>에서 2017.3.1. 인출.
- 임유진. (2016). 고졸 청년의 좋은 일자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비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장혜경, 홍승아, 이상원, 김영란, 강은화, 김고은. (2006).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서
울: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 황정임, 최인희, 김영란, 주재선, 김소영, 오현경, 김수지. (2015). *2015년 가족실
태조사 분석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은화. (2013). *직장기혼여성의 출산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
교.
- 전현배, 이인재. (2009).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9(1), pp.1-25.
- 정혜은, 진미정.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pp.151-168.
- 최정민. (2014). 인근접거주 가구의 교류실태와 주거환경 분석.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
회지*, 15(4), pp.59-77.
- 최정민. (2016). 인근접거주 촉진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4(2), pp.33-52.
- 통계청. (2016a). *2015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6/index.board?bmode=read&bSeq=&aSeq=35836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Target=title&Txt=에서 2017.3.1. 인출.
- 통계청. (2016b). *2016 일·가정양립 지표*.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58035에서 2017.3.1. 인출.
- 통계청. (2016c). 「e-지방지표」 중 면적(km²).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conn_path=I3에서 2017.3.1. 인출.

통계청. (2017). 노인자녀동거율(1995~2015).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26에서 2017.3.1. 인출

한국노동연구원. (2016). 한국노동패널 1~18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한영선, 이영숙. (2014).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pp.163-182.

한준. (2005). "사건사분석". 이재열 편.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원리와 실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219-268.

Becker, O. A., & Steinbach, A. (2012). Relations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System.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37(3-4), pp.543-566.

Becker, G.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Bengtson, V. L., & Roberts, R. E. (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pp.856-870.

Bettio, F., & Plantenga, J. (2004). Comparing care regimes in Europe. *Feminist Economics*, 10(1), pp.85-113.

Gordon, R., & Shirer, R. (2006). The Best Laid Plans: Expectations for child care and the Stability of Care Arrange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2), pp.1-36.

Hank, K., & Buber, I. (2009). Grandparent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Findings from the 2004 Europe. *Journal of Family Issue*, 30(1), pp.53-73.

Hank, K., & Kreyenfeld, M. (2003). A multilevel analysis of child care and women's fert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3), pp.584-596.

Igel, C., & Szydlik, M. (2011). Grandchild care and welfare state arrangement in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1(3), pp.210-224.

Leibenstein, H. (1974). An interpret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Promising path or blind all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2(2). pp.457-479.

MyGeoPosition.com. <http://mygeoposition.com/>

Talyor-Gooby, P. (2004).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sai, F., Motamed, S., Elia, N., & Rougemond, A. C. (2011). Evolution in intergenerational exchanges between elderly people and their grandchildren in Taiwan: Data from a multiple round cross-sectional study from 1993-2007. *BMC Public Health*, 11(1), p.639.

배호중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학사 및 석사를 마쳤으며,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자산과 삶의 질, 청소년복지이며, 현재 자산복지, 사회복지정책분석 등을 공부하고 있다.
(E-mail: baseball@kwidmail.re.kr)

한창근은 서울대학교 학사 및 석사를 마쳤으며,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에서 사회사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분석, 자산과 삶의 질, 노인복지이며, 현재 사회복지정책분석, 자산과 삶의 질, 노인복지를 연구하고 있다.
(E-mail: chkhan@skku.edu)

양은모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쳤으며,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국제경제, 환경경제, 가족경제이며, 현재 국제경제, 정책평가 등을 공부하고 있다.
(E-mail: superqueen0214@hotmail.com)

Childbirth and the Residential Distance to the Wife's Parents:

Focusing on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Bae, Ho Joong

Han, Chang-Keun

Yang, Eun Mo

(Sungkyunkwan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o examine how newly married couple's residential distance to the wife's parents affects the timing of childbirth. In particular, we closely examined the period between marriage and first childbirths for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We measured the newly married couple's residence distance to wife's parents house in 3 ways: proxy distance measured by km (logged for analysis), categorized distance to 5 groups, and residence in the same macro district. The key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general, the newly married couples who live in a same macro district with their wife's parents are likely to have a child earlier than those who do not. Second, the residential distance (measured by logged km) between a newly married couple and the wife's parents is positively related to having a first baby earlier. However, the analysis with the categorical measure of residence distance reports that the effect of residence distance is not linear in that the two longest distance group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in terms of childbirth probability compared to the reference group which has the shortest distance. Despite several limitations in the study sample, the measurement, and the possibility of residence movement, this study may help build knowledge regarding newly married couple's behaviors of childbirth. This study concludes with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boosting childbirth among newly married couples.

Keywords: Childbirth, Residential Distance to Wife's Parents, Survival Analysi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